

네트워크 지식국가론 :

정보화시대 국가변환의 개념화

김상배
(서울대학교)

〈차례〉

- | | |
|------------------------|-----------------------|
| I. 머리말 | IV. 네트워크국가의 부상과 지식 변수 |
| II. 정보화시대 국가변환의 분석틀 | V.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매력정치 |
| III. 지식국가의 부상과 네트워크 변수 | VI. 맷음말 |

· 주제어: 정보화, 지식, 권력, 네트워크, 국가, 변환, 세계정치 Informatization, Knowledge, Power, Network, State, Transformation, Global Politics

【한글초록】

최근 단순한 국민국가(nation-state)의 쇠퇴론을 넘어서 국가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로 21세기를 맞이하는 국가는 그냥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위상의 재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환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변환론이 지닌 한계는 정작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의 변화가 귀결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네트워크 지식국가(network knowledge state)의 개념을 통해서 21세기 국가변화의 미래를 개념화하였다.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식’이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그 수단과 목표로서 지식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그 조직과 작동에 있어서도 지식변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국민국가의 양대 축인 국민/민족(nation)과 국가(state)의 이완을 배경으로 하여 영토적 경계의 안과 밖에서 출현하는 개방형 복합 네트워크의 형태로 부상하는 국가이다. 마지막 키워드는 ‘국가’이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변화하는 세계정치 환경에 대응하여 그 기능적 성격과 존재적 형태 및 권력 메커니즘을 교묘히 변형시키고 있는 국가이다. 요컨대,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지식과 네트워크의 복합적 부상에 대응하여 자기조직(self-organizing)의 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국가의 미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I. 머리말

최근 단순한 국민국가(nation-state)의 쇠퇴론을 넘어서 국가의 변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로 21세기를 맞이하는 국가는 그냥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위상의 재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환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변환론이 지닌 한계는 정작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의 변환이 귀결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변환의 와중에 있다 보니까 변환이라는 ‘과정’은 직감할 수 있어도 그 ‘결과’를 미리 짚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환의 뒤풍무니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변환의 미래를 미리 읽고 그 길목을 지켜야 하는 이론적 과제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21세기 국가변환의 미래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벌이고자 한다.

이 글은 21세기 국가변환의 동인(動因)으로서 기술·정보·지식(이하 통칭하여 지식) 변수의 역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실제로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국가의 업무는 고대부터 있어 왔지만, 근대 국민국가까지만 해도 지식 변수는 부강(富強)과 관련된 여타 변수에 비해서 부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국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 변수에 대한 의존이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이제 지식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그 자체가 독립적인 권력 자원으로 부상하였다. 이렇게 지식자원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국가목표에 대한 국가 행위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그 결과 국가의 기능적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근대적인 의미의 부강국가를 넘어서는 ‘지식국가(knowledge state)’의 부상이 관찰된다.¹⁾

지식국가의 부상은 국가와 여타 행위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재 형태도 변화시킨다. 염밀한 의미에서 21세기 지식국가는 종전의 국민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지식국가는 여타 행위자들을 아우르는 네트워킹에 능숙하고, 그 자체의 조직형태뿐만 아니라 작동방식도 네트워크의 형태로 변환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국가변환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국민국가의 양대 축인, 국민/민족(nation)²⁾과 국가(state)의 결합이 이완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안과 밖으로 넘나드는 활동이 증대되면서 국민/민족이라는 정치/문화 공동체와 국가의 관계가 네트워크의 형태로 재설정되는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의 부상이 관찰된다.³⁾

-
- 1) 명시적으로 지식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존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최정운, 『지식국가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노동통계 발달의 정치적 의미』(서울: 삼성출판사, 1992); 野中郁次郎(外編), 『知識國家論序説: 新たな政策過程のパラダイム』(東京: 東洋經濟新報社, 2003); 하영선(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서울: 풀빛, 2004).
 - 2) 국민국가에서 국가와 결합된 국민/민족(nation)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네이션’이며, 이는 ‘국민(國民)’이라고 번역된다. 또 하나는 ‘문화공동체로서의 네이션’이며, 이는 ‘민족(民族)’이라고 번역된다. 이용희, 『미래의 세계정치: 국가연합론 강의』(서울: 민음사, 1994), p.120.
 - 3) 명시적으로 네트워크국가 또는 네트워크 정치체(network polity)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존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Sandra Braman, “Horizons of the State: Information Policy and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45(4), (Autumn, 1995), pp.4-24; Manuel Castells, *End of Millennium*, (Malden,

21세기 국가가 네트워크화 된다고 해서, 이것이 국가라고 하는 존재의 소멸이나 탈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민족으로부터 이완된 국가가 네트워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국가의 권력메커니즘은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재생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지식 변수의 역할이다. 특히 IT(information technology)는 네트워크국가의 구성과 작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마치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듯이, 국가는 IT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엮어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국가변환은 지식국가와 네트워크국가가 교묘하게 얹히면서 드러나는 '네트워크 지식국가(network knowledge state)'의 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⁴⁾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부상은 일반이론의 차원에서 제기된 개념이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적 현실이 아님은 물론이다. 더군다나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부강국가로부터 네트워크 지식국가로 이행하는 식의 무차별적 변환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세계정치 현실에서는 특정 지역의 국가들이 다른 지역의 국가들보다 앞장서서 변환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군사·경제·문화 등과 같은 영역별로도 국가변환의 정도는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국민부강국가와 네트워크 지식국가가 병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네트워크 지식국가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벌이는 이유는,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부상이 21세기 국가변환의 메가트렌드를 제시하는 일종의 '문명표준(standards of civilization)'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의 본격적 탐구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연구의 인식론을 뛰어 넘는 시각

MA: Blackwell, 1998); Christopher K. Ansell,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July 2000), pp.303–333; Julianne Stewart, "Is The Network State Reflected in Australian e–Health Project Evaluation?" Paper submitted to Communications Research Forum 2000, (2000), <http://www.crf.dicita.gov.au/papers2000/stewart.pdf> (검색일: 2006년 2월 14일); Martin Carnoy and Manuel Castells,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s*, 1(1), (2001), pp.1–18; Seán Ó Riain,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하영선(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 국가 건설』(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4) 네트워크 지식국가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쓰고 있는 기존연구는 거의 없지만, 네트워크와 지식의 양측면을 모두 고려한 국가변환의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평화포럼21(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서울: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2005); 한편 비슷한 맥락에서 베추얼국가(virtual state)의 개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설명하다시피, 베추얼국가는 논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 Paul Frissen, "The Virtual State: Postmodernisation, Informatis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Brian D. Loader, (ed.),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Politics, Technology, and Global Restructur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pp.111–125;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1999); Jerry Everard, *Virtual States: The Internet a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Jane E. Fountain, *Building the Virtual Stat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Chang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은, 폐쇄체계(closed system)의 시각에서 국가를 보는 전통적 국제정치이론과는 달리, 개방체계(open system)로서 국가를 설정한다. 개방체계의 시각에서 본 국가는 국경(border)으로 구획된 고립된 노드(node)라기보다는, 네트워크상에서 부단히 경계들(boundaries)을 재구성해가는 ‘자기생성국가(autopoitic state)’ 또는 ‘자기조직국가(self-organizing state)’이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은 고립된 행위자로서의 ‘국민/민족들 간의 관계(inter-nations)’를 파악하는 기존의 국제정치학(國際政治學, international politics)을 넘어서, 개방체계의 형태를 띠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즉 링크(link) 및 이들 노드와 링크가 만드는 네트워크 전체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에 주목하는 망제정치학(網際政治學, internetwork politics) 또는 네트워크 세계정치학의 시각을 채택한다.⁵⁾

지식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21세기의 국가변환을 분석적으로 다룬 국제정치학계의 기존 연구는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학이나 경제학 및 경영학 등에서 지식과 네트워크를 화두로 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양과 질에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려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근대적인 맥락에서 지식국가를 다룬 연구들이 예외적으로 눈에 띄지만, 이들 연구는 전반적으로 국가변환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탐구가 부족하다.⁶⁾ 한편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21세기 제국(empire),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지구정치체(global polity), 지구국가(global state), 세계국가(world state),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 등의 개념을

5) 이 글의 시각에 영향을 준, 개방체계와 자기조직화, 그리고 네트워크와 복잡계에 대한 주요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Sandra Braman, “The Autopoietic State: Communication and Democratic Potential in the Ne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6), (1994), pp.358–368; S. Braman, “Horizons of the State”; Christopher K. Ansell and Steven Weber,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Open System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 (1999), pp.73–93;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2001); Albert-László Barabási,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2); John Urry, *Global Complexity*, (Cambridge: Polity, 2003);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세계정치』 26(1), (2005, 봄·여름), pp.93–120; 민병원, “불확실성 속의 질서: 복잡계이론과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40(1), (2006, 봄), pp.201–221.

6) 최정운, 『지식국가론』; Nicos Poulantzas,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and New York: Verso, 1978); Susan Strange, *States and Market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Pinter, 1994); Peter Burke,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From Gutenberg to Diderot*, (Cambridge: Polity, 2000); Bob Jessop,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2003).

7)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James N. Rosenau,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Morten Ougaard and Richard Higgott, (eds.), *Towards a Global Po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Martin Shaw, *Theory of the Global State: Globality as an Unfinished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Alexander Wendt,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9(4), (2003), pp.491–542; Anne-Marie Slaughter, *A New World Orde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통해서 탈근대 단위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연구들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⁷⁾ 그러나 이들 연구의 한계는 21세기 국가변환의 동인으로서의 지식 변수의 역할에 대한 입체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⁸⁾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글에서 제기하는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은 국내외 학계의 논의를 명실상부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21세기 국가변환을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보화의 맥락에서 지식과 네트워크 및 국가의 개념적 변환을 검토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네트워크 지식 국가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식자원의 부상에 따른 국가변환이라는 관점에서 지식국가의 부상과 변환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의 부상에 따른 국가변환이라는 관점에서 네트워크국가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식국가와 네트워크국가의 변환이 만나는 영역에서 관찰되는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권력 메커니즘을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주장을 종합·요약하고, 네트워크 지식국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경험적·이론적 과제들을 지적하였다.

II. 정보화시대 국가변환의 분석틀

국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형태와 기능을 달리해 왔다. 예를 들어, 세계사에 등장했던 국가들은 도시국가로부터 고대국가와 중세국가 및 국민국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보면 국민국가도 보편적인 국가는 아니고 서구의 근대라는 특정 시기에 출현한 국가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실제로 국민국가는 영토적 경계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국민/민족이라고 하는 정치·문화공동체를 활동배경으로 하면서 부강(富強)의 목표를 추구하던 국가의 근대적 형태로서 이해된다.⁹⁾ 그런데 이러한 국민국가도 20세기 중후반 이래 그 형태와 기능의 변환을 경험하고 있다. 비물질적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초국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영토적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이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여 국민/민족 자원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국가의 형태와 기능도 변환된다. 그렇다고 국가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국민/민족을 넘어서 네트워크라는 좀 더 확장된 사회적 공간 속으로 스

8) 지식 변수에 대한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 (2003, 겨울) pp.33-58.

9) 이 글이 시도하는 개념화 작업을 염두에 둘 때, 형태와 기능의 측면에서 국가(state)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정의를 내려 보는 것이 유용하다. 형태 측면에서 국가는 일정한 물리적 공간의 경계 내에서 배타적 권력을 행사하는 특정한 기구(agency)이나 조직, 또는 제도의 존재를 의미한다. 한편, 기능 측면에서 국가는 사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고 공권력을 행사할 근거를 얻는다. 근대 국가를 ‘어느 사회 내에서 조직된 폭력의 정당한 사용을 독점하는 조직’으로 보는 베버(Max Weber)적 개념 정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근대 국민국가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서울: 박영사, 1962).

며들면서 재조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변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지식과 네트워크의 변환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¹⁰⁾

먼저 정보화에 의한 지식과 권력의 변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 본 정보화는 기술·정보·과학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세계정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도구적 지식'의 생산이 양적으로 증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이러한 과정이 지니는 전략적 의미는 지식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이, 기존의 부강(富強)을 추구하는 물질권력 자원을 넘어서, 새로운 지식권력 자원으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보화는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미 생산된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특히 정보화는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메타지식(meta-knowledge)'이나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적 지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성적 메타지식이 지니는 국제정치학적 의미는 행위자 차원에 기반을 둔 물질적 권력을 넘어서 구조/체계 차원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지식권력, 즉 '매력(soft power)'¹¹⁾을 부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과 권력의 복합적 변환으로서의 정보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변환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정보화는 지식생산의 차원에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더 나아가 기초 및 응용과학을 진흥하는 지식국가를 부상시킨다.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식자원을 도구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도구적 지식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는 지식활용의 차원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저장·활용케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식의 재생산에 관여하는 지식국가의 부상을 가능케 한다. 이는 지식의 의미를 규정하고 표준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지식의 담론까지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적 지식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정보화가 궁극적으로 국민부강국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된 도구적 지식국가로부터 새로운 지식권력을 행사하는 구성적 지식국가로 변환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 본 정보화의 진전은 단순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복합 네트워크의 부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화의 대표적 산물인 인터넷은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상호접속을 통해 만들어내는, 다물체(多物體)로 구성된 탈집중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또 다른 특성은 네트워크상의 다물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동케 하는 집중 네트워크에 있다. 요컨대, 인터넷은 그 '하드웨어적 구성'은 분산되어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적 기능'은 집중되어 있는 복합 시스템이다. 이러한 불리적 네트워크의 특성은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네트워크에도 투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정보화는 전통적인 피라미드형의 단순 네트워크인 '위계질서(hierarchy)'를 넘어서 복합 네트워크가 등장하는 과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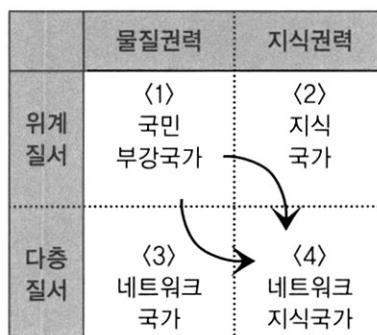
10) 정보화의 개념에 대한 요약으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Manuel Castells,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4), pp.3-48; 김상배, "기술과 지식, 그리고 기식(技識): 정보혁명의 국제정치학적 탐구를 위한 개념적 기초," 『국제정치논총』 45(1), (2005, 봄) pp.57-82.

11) 평화포럼21(편), 『매력국가 만들기』;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다. 여기서 복합 네트워크란 집중과 탈집중의 네트워크가 둘 이상 중첩되는 ‘다층질서 (heterarchy)’ 형태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복합 네트워크상의 집중과 탈집중이라는, 모순적인 두 가지의 메커니즘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메타지식으로서의 IT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¹²⁾

복합 네트워크의 등장으로서의 정보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변환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집중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니는 정보화는 국가기구의 수직적 메커니즘을 유연한 형태로 재생산함으로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폐쇄형의 조직형태를 유지하면서 작동방식의 효율성만을 제고하는 ‘위계질서형 네트워크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탈집중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는 정보화는 국가 이외의 비국가 행위자가 부상하는 수평적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개방형의 조직형태를 지닌 국가가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작동하는 ‘다층질서형 네트워크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정보화가 궁극적으로 폐쇄형 단순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국민국가로부터 개방형 복합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네트워크국가로 변환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림 1〉 국가변환의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국가변환의 분석틀을 마련해 볼 수 있다. 가로축은 좁은 의미의 정보화에서 발견되는 권력의 변환이며, 세로축은 넓은 의미의 정보화에서 발견되는 네트워크의 변환이다. 논리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권력과 네트워크의 변환은 각각 두 차원의 국가변환, 즉 지식국가와 네트워크국가의 변환을 야기한다. 그렇지만 세계정치 현실에서 두 차원의 국가변환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부상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의 화살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 국가변환은 두 가지의 논리적 경로를 거쳐서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각 경로마다 변환의 동인이 되는 지식의 역할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과 네트워크 및 국가의 조합비율도 다르다는 점이다.

12) J. Arquilla and 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pp.316–317;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 pp.100–101.

첫 번째 경로는 <1>영역의 국민부강국가가 <2>영역의 지식국가를 거쳐서 <4>영역의 네트워크 지식국가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이는 도구적 지식으로서 지식자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상한 지식국가가 지식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적 성격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국가와 결합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경로는 <1>영역의 국민부강국가가 <3>영역의 네트워크국가를 거쳐서 <4>영역의 네트워크 지식국가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이는 국민/민족과 국가의 결합이 이완되는 과정에서 출현한 네트워크국가의 조직 및 작동메커니즘에 구성적 메타지식 변수가 관여하는 과정이다. 반복컨대, 이러한 두 가지 경로는 논리적으로 구분해 본 것이며, 지식국가와 네트워크국가가 만나서 네트워크 지식국가로 변환되는 복합 메커니즘을 분석적으로 밝혀보기 위해서 고안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21세기 국가변환의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III. 지식국가의 부상과 네트워크 변수

네트워크 지식국가에 이르는 첫 번째 경로는 지식자원을 새로운 국가목표로서 추구하는 지식국가의 부상과 그 변환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지식자원의 부상에 따른 국가변환의 논의는 정보화로 인해서 부각되었지만, 그 역사적 기원은 근대 초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식생산의 주체라고 할 때 지식국가 이외에도 지식도시, 지식제국, 지식교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³⁾ 그러나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서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의 현상이다. 근대 초기에 이르러 계몽주의, 르네상스, 종교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중세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지식구조가 붕괴되고,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전후하여 국민국가 중심의 새로운 지식구조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17세기경에 이르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부국강병의 달성을 목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국가적 사업을 벌인다. 근대 지식국가는 종전에는 교회가 관장했던 교육 분야에서도 권위를 획득하게 되고 특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지식생산 활동의 목적을 규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로서 등장하였다. 이제 모든 지식생산은 국가의 이익과 권력을 증진시킨다는 전제 하에 명분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¹⁴⁾

근대 국민국가의 전개과정에서 관찰되는 지식국가의 측면은 주로 기든스(Anthony Giddens)가 국민국가의 제도적 측면 중의 하나로 개념화한 ‘산업주의(industrialism)’에 해당된다.¹⁵⁾ 산업주의는 상품생산의 동력원으로 무생물적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

13) Harold A. Innis, *Empire and Communic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50).

14) S. Strange, *States and Markets*, pp.125-127.

15)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기계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산업주의는 인간과 자연 사이를 매개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주의는 군사력(전쟁의 산업화 맥락에서 본 폭력수단의 통제), 자본주의(경쟁적 노동과 상품시장의 맥락에서 본 자본축적), 감시(정보의 통제와 사회적 감독) 등과 같이, 기든스가 제시한 근대 국가의 여타 제도적 차원과 연결되어 군사기술, 산업기술,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발현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서구에서 국민국가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서구 국민국가의 대외적 평창과정에서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였다.¹⁶⁾

이러한 근대 지식국가의 모습은 20세기 들어서도 지속되는데, 2차 대전 이후 냉전기 군비 경쟁의 와중에 이루어진 군사기술의 혁신을 보면, 기술 생산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IT의 개발에서 미국의 국가, 특히 국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인터넷과 같은 IT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도 국가의 역할은 필수 불가결하였다.¹⁷⁾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국가는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전 사회와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의 생산을 지원하는 지식국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이러한 군용기술들은 스픈 오프(spin-off)의 과정을 거쳐서 상용기술로 전용되기에 이른다.¹⁸⁾ 또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IT의 발달에 따른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의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미국은 ‘군사분야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을 통해서 산업화시대의 군사력을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형태로 변환시킬 지적 토대를 모색한다.¹⁹⁾

경제 분야를 보면 근대 아래 지속된 지식국가의 모습이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1980년대 아래 선진국의 국가들은 첨단기술개발과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는 제솝(Bob Jessop)이 말하는 ‘슈페터적 경쟁국가(Schumpeterian competition state)’의 형태를 띤 지식국가, 특히 기술국가(technology state)의 모습이다.²⁰⁾ 이는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류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²¹⁾ 또한 이러한 국가는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기술정책을 연상시키는데, 이러한 점에서 발전국가와 지식국가가 결합된 형태의 ‘발전지식국가(developmental

16) Maurice Pearton, *The Knowledgeable State: Diplomacy, War and Technology since 1830*, (London: Burnett Books, 1982); Daniel R. Headrick, *The Invisible Weapon: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s, 1851-1945*,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7) 土屋大洋, 『情報と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 インターネットから見た國家』(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

18) John A. Alic et. al., *Beyond Spinoff: Military and Commercial Technologies in a Changing World*,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2); Wayne Sandholtz, et al., *The Highest Stakes: The Economic Foundations of the Next Security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9) J. Arquilla and 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20) B. Jessop,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Philip G. Cerny, *The Changing Architecture of Politics: Structure, Agency, and the Future of the State*, (London: Sage, 1990).

21)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1990).

knowledge state)' 라고도 부를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발전지식국가의 사례를 보면, 국가의 경계 내에서 자본의 경쟁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기술혁신이나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국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지식의 생산과 확산을 증진하는 국가의 역할로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나 핵심기술 분야의 표준화, 그리고 기타 지적공공재의 제공을 위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발전지식국가의 등장은 로즈크랜스(Richard Rosecrance)가 말하는, 영토국가와 무역국가를 넘어서는, '버추얼국가(virtual state)'의 부상과 맥을 같이 한다. 버추얼국가의 개념은 전통적인 토지 변수를 넘어서는 노동, 자본, 정보 등의 비물질적 자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버추얼국가란 토지, 즉 영토 기반의 생산능력을 최소화한 정치단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버추얼국가는 물질적 생산은 해외로 내보내고 연구개발과 제품디자인에 중점을 두며, 고부가가치의 무형의 상품 생산이나 고도의 서비스에 전문화하는 국가모델이다. 산업화시대의 제조업을 담당하는 '육체국가'에 대비되는 정보화시대의 '두뇌국가'를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로즈크랜스는 이러한 버추얼국가의 사례로서, 적합한 사례인 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은 소위 강소국(強小國)을 듣다.²²⁾

기본적으로 로즈크랜스의 버추얼국가는 국민국가로서의 지식국가를 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비물질적 변수의 흐름을 따라서 작동하는 네트워크국가에 대한 논의를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 다시 말해, 버추얼국가는 도구적 관점에서 지식자원을 추구하는 과정이 국가가 영토적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20세기 후반 들어 지구화와 정보화의 진전은 지식생산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현상을 부추긴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혁신이 지구화되며 지식생산에 대한 담론이 국민국가의 경계 밖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식생산이 국민국가의 통제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은 국가의 조직형태나 기능적 역할이 변환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최근 군사 분야에서 RMA의 추구는 자연스럽게 군사전략과 군사조직 및 군사폐리다임의 변환, 즉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소위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기 미국의 사례를 보면, 특히 9.11 이후 테러와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처하여 군사조직을 개혁하고 해외 주둔 미군의 군사태세를 유동군의 형태로 바꿈으로서 네트워크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변환과 함께 주목할 것은 국민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군사목적의 기술혁신이 국가통제 밖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야의 기술혁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0년대부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스픬 온(spin-on) 현상, 즉 민간 부분의 기술혁신이 군사부문으로 역유입되는 현상이다.²³⁾ 이밖에도 민간 군사지식 전문서비스업체인 PMC(private military service)가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국가 행위자에 못지않은

22) R. Rosecrance,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23) W. Sandholtz, et al., *The Highest Stakes*.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²⁴⁾

한편 경제 분야에서 기술경쟁의 가속화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경제 네트워크의 부상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첨단산업의 생산기지가 국내공간으로부터 지구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초국적 생산네트워크(cross-national production networks, CPNs)가 구축되고 있으며, 무역이나 금융 분야에서도 IT네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상품과 화폐의 지구적 흐름에 대한 국민국가 차원의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 한편 지식 생산 자체와 관련해서도 산업정책 또는 기술정책 차원에서 발전국가가 주도하던 R&D 컨소시엄 모델이 실패로 판명 났으며, 국가가 나서는 법률상(*de jure*)의 표준화 메커니즘을 대체하여 기업들 간의 사실상(*de facto*) 표준경쟁이 부상하고 있다. 요컨대, IT분야의 지식생산에서 국민국가가 담당했던 주도적 역할은 민간 행위자들의 부상과 함께 좀 더 네트워크적인 형태로 불가피한 변환을 겪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서 영미형 조절국가(regulatory state) 모델의 도입을 통한 제도조정에 대한 논의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발전지식국가의 모습은 좀 더 네트워크적인 형태로 변환되는데, 새로이 관찰되는 지식국가는 여전히 지식자원을 도구적 용도로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의 형태 변환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이렇게 부상하는 지식국가는 발전국가에 대비되는 조절국가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조절지식국가(regulatory knowledge stat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오리엥(Seán Ó Riain)이 ‘발전관료국가(developmental bureaucratic state, DBS)’를 넘어서는 ‘발전네트워크국가(developmental network state, DNS)’라고 개념화한 모델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²⁵⁾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정보화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 창출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의 정보화 모델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조절지식국가의 출현과 연이은 변환에서 보는 것은 지식자원이 중요해진 것만큼 지식의 생산과정은 국민국가의 통제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환경에서 생산된 지식이 초국적으로 유통되면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가의 구성원들은 영토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정체성도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정당성을 유지하고 국내적 존재기반을 유지하는 길은, 글로벌 환경을 염두에 두고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조직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와중에 불가피하게 기존에 국민/민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국가형태의 변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요컨대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국가는 종래와 같이 영토를 바탕으로 한 국민/민족의 경계 안에 갇힌 국민국가의 모습은 아니며 좀 더 네트워크화된 새로운 형태의 국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4) Anna Leander, “The Power to Construct International Security: On the Significanc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Millennium*, 33(3), (2005), pp.803–825.

25) S. Ó Riain,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IV. 네트워크국가의 부상과 지식 변수

네트워크 지식국가에 이르는 두 번째 경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네트워크국가의 부상과 그 변환의 과정에서 발견된다. 네트워크국가의 부상은 기존 국민국가의 안과 밖이 연결되는 패턴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민족 구성원들의 정체성도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국가는 국가 활동에 있어서 영토적 공간의 적실성이 상실되는 현상과 국민/민족이라는 정치/문화 공동체가 재조정되는 현상을 수반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국가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국가는 개별국가 차원에 주어지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국적 차원의 제도적 연결망을 구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의 주권이 여타 행위자들과 공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적절하게 국내의 하위 단위체에게 분산·이전시킴으로써 그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다. 이는 주로 지방 자치정부나 비정부 기구들이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국민/민족의 정체성으로부터 분화된 시민사회, 이의집단, 지방사회, 개인 등이 형성하는 탈 국민/민족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나타난다.²⁶⁾

카노이(Martin Carnoy)와 카스텔(Manuel Castells)의 ‘네트워크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를 개념화하려는 시도이다. 그들에 의하면, “새로운 국가는 네트워크로서 기능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모든 노드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동한다... 네트워크국가는 축적과 지배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통합되는데, 국가정책으로서 채택되는 공세적인 측면과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해야 하는 수세적인 측면이 맞물리면서 등장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국가는 산업화시대로부터 정보화시대로의 전환기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투쟁과 지정학적 전략의 산물로서 생겨난다.”²⁷⁾ 안셀(Christopher K. Ansell)도 “기능적으로 영토적으로는 해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간 그리고 정부 간의 관계망을 통해서 국가영역도 상호 연계되고 국가영역과 사회영역도 상호 연계된 독자적인 현대적 정체(政體)”로서 네트워크정체, 즉 네트워크국가의 개념을 제시한다.²⁸⁾

이렇게 통합과 분화의 동학을 동시에 보여주는 네트워크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 먼저 주목할 점은 네트워크국가는 그 개념적 외연이 개방체계의 형태를 띠는 국가라는 사실이다. 이는 안과 밖이 명확히 구분되고 일차원적이고

26) 국가의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현상은 현실 세계정치에서 좀 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탈영토화 와중에도 네트워크국가의 국민/민족 기반이 상당부분 유지되거나, 국가의 구성단위가 여전히 국민/민족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의 성격이 가미될 수도 있다. 또한 해외동포 네트워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민족의 정체성이 국가를 가로질러 좀 더 큰 네트워크로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lenn McCormick, “Stateless Nations: ‘I Pledge Allegiance To...?’” Michael J. Mazarr, (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World Politics*, (New York: Palgrave, 2002), pp.11-23.

27) M. Carnoy and M. Castells,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14.

28) C.K. Ansell, “The Networked Polity,” p.303.

경직된 경계를 가진 폐쇄체계로 개념화되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태와 대비된다. 네트워크국가는 안과 밖이 상호 침투하고 다차원적이고 유동적인 경계를 가진 시스템이다. 개방체계인 네트워크국가의 내부는 외부환경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환경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다만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밀도를 준거로 하여 외부환경과의 경계가 생긴다. 다시 말해, 조직 내부의 상호작용은 그 외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보다 밀도가 더 높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호작용 자체가 핵심적인 분석 단위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설정된 경계는 상호작용의 밀도변화에 유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재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국가는 안과 밖에서 제기되는 도전에 대하여 부단히 변환해 가는 ‘자기조직국가’의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²⁹⁾

네트워크국가의 조직형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행위자 차원에서 조직의 성격을 탐구하는 개방체계의 시각을 넘어서, 구조/체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네트워크이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이론에서는 노드 그 자체보다는 노드들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분석의 초점인데, 이러한 관계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를 역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이론은 노드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에 머물지 않으며, 오히려 네트워크상에서 형성되는 관계 자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계들은 노드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네트워크의 속성은 노드나 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따라서 노드들의 조직형태는 네트워크 자체에 담겨진 관계들의 결과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³⁰⁾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네트워크국가라는 조직은 개별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 또는 개별국가들과 비국가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³¹⁾

이상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네트워크국가들이 만들어내는 다층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국가는 국민국가 간 네트워크, 좀 더 염밀하게 말하면, 정부 간 네트워크의 형태를 띤다. G8이나 OECD와 같이 국가군별로 관심사에 따라서 형성되는 공식 외교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기구의 기능적 분화를 바탕으로 하여 유사조직들이 형성하는 ‘초정부주의 네트워크’도 있는데, 이는 슬로터(Anne-Marie Slaughter)의 ‘해산된 국가(disaggregated state)³²⁾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네트워크국가는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 지역 차원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즉 지역통합체의 형태를 띤다. 지역 차원에서 초국적 조직이 형성되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 차원에서 지방정부나 비국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국가하부 네트워크도 형성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연합인데, 앞서 언급한 카노이와 카스텔, 그리고 앤셀의 네트워크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를 경험적 사례로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끝으로, 네트워크국가는 국가 행위자뿐만

29) C.K. Ansell and S. Weber,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pp.75–77; S. Braman, “The Autopoietic State,” p.366.

30) C.K. Ansell and S. Weber,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p.78.

31) C.K. Ansell, “The Networked Polity,” pp.308–309.

32) A. Slaughter, *A New World Order*.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까지 참여하여 형성하는 복합 네트워크의 형태를 뜻다. 이는 국가, 국제기구, 비국가 행위자 등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사실상(*de facto*)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네트워크국가 모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국가의 모델에서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 요구되는 역할은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³³⁾’의 제공에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국가의 역할은, ‘집중화(centralization)’와 구분되는 의미에서 본, ‘중심성’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의미한다. 클라크(Ian Clark)가 지구화시대의 국가를 ‘브로커 국가(broker state)³⁴⁾’로 개념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조정자 역할은 행정조직들의 관할권의 경계를 넘어서 또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넘어서 이루어진다. 또한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은 정규 행정조직 내에서 파생될 수도 있지만, 혹은 특정 프로젝트를 관리할 목적으로 새로이 고안된, 일종의 베추얼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국가의 조정자 역할은 제습이 주장하는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메타 거버넌스는 다양한 거버넌스 메커니즘간의 상대적 균형을 모색함으로서 그들 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습에 의하면, 시장의 무정부상태(anarchy), 국가통제의 위계질서(hierarchy), 거버넌스의 다층질서(heterarchy) 중 어느 하나의 메커니즘만으로는 권력관계의 완전한 균형과 이익의 형평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사회체계의 복잡성, 구조적 모순, 전략적 딜레마, 양면적인 목표의 존재 등으로 인해서 시장 메커니즘이나 국가통제 또는 거버넌스의 자기조직화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메타구조(meta-structure)’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종의 ‘거버넌스의 거버넌스(the governance of governance)’로서 메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³⁵⁾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네트워크국가가 네트워크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드들 간의 관계망이 형성되는 데 활용되는 I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의 추진에 다른 정부의 베추얼화(virtualization)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파운틴(Jane Fountain)은

33) C.K. Ansell, “The Networked Polity,” p.309.

34) Ian Clark,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54.

35) 제습에 의하면, 국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장을 마련하고, 상이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호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공동체 내에서 대화와 담론 형성의 조직자 역할을 담당하고, 정보와 첨보를 상대적으로 독점하며, 거버넌스 관련 분쟁을 호소하는장을 제공하고, 시스템 통합과 사회적 응집을 목적으로 권력격차의 심화를 조정하고, 개인과 집단 행위자의 정체성·전략적 능력·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거버넌스가 실패하는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등의 메타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한다.; B. Jessop,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pp.242~243.

버추얼국가의 개념을 통해서 IT의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의 네트워크화를 논한다. 파운틴의 버추얼국가는 점차로 그 구조와 능력이 인터넷과 컴퓨터에 의존하는 버추얼정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류 기반의 업무를 하는 관료제 조직이 웹 기반의 탈관료제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환된다. 또한 이러한 버추얼국가의 등장은 정부조직 자체의 효율적 재편을 넘어서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단순하면서도 더욱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변환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역관계를 반영하는 제도적 배열의 등장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버추얼화 또는 네트워크화를 가능케 한 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메타지식으로서의 IT의 존재이다.³⁶⁾

한편, 디지털 메타지식으로서의 IT의 발달은 네트워크국가의 대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토적 경계의 안과 밖에서 짜이는 분합(分合, fragmeration)³⁷⁾ 과정에서 네트워크국가의 다층적 상호의존은 IT의 존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강대국의 제국적 네트워크나 각국의 정부 간 네트워크, 또는 지역통합의 네트워크이전, 아니면 다국적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형성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전 간에 이들 네트워크는 모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이동통신과 같은 IT네트워크의 존재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국가가 발휘하는 조정자의 역할도 조직지(組織知) 형태의 메타지식이나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적 지식의 생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요컨대 네트워크국가의 부상과 앞서 언급한 지식자원과는 다른 형태의 지식, 즉 구성적 메타지식의 존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네트워크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식국가와의 결합을 통해서 네트워크 지식국가로 변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V.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매력정치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21세기 국가변환은 도구적 지식의 생산과 구성적 지식의 활용 과정에서 국가의 형태와 기능이 네트워크화되는, 지식국가와 네트워크국가의 복합모델, 즉 네트워크 지식국가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은 지식, 네트워크, 국가의 세 변수가 만들어내는 교묘한 조합을 이해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제 속이 제시한 ‘슈페터적 균로복지 탈네이션 레짐(Schumpeterian workfare postnational regimes)’³⁸⁾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세 변수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속은 ‘슈페터적’이라는 용어를 통해 국가변환의 동인으로서 지식 변수의 중요성에 주목할 뿐만 아

36) J.E. Fountain, *Building the Virtual State*.

37) J.N. Rosenau, *Distant Proximities*.

38) 제속은 복지(welfare)를 넘어서는 균로복지(workfare)를 21세기 자본주의국가의 한 측면으로서 파악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B. Jessop,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pp.247-276.

나라, ‘탈네이션’이라는 용어를 통해 국가의 기능을 하는 새로운 단위가 국민/민족을 넘어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국가를 연상시키는 ‘국가’보다는 ‘레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치’의 기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화 작업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식, 네트워크, 국가의 세 변수가 만나서 교묘한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21세기 지식권력의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데 있다.

지식권력의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메타지식으로서의 IT가 부상한 정보화시대에 부각되었지만, 그 역사적 기원은 근대 초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 초기에 이르러 규칙적이고 체계화된 정보의 수집·저장과 이를 통한 지식의 창출·활용은 서구 국가에서 발견되는 관료제의 발달과 연결된다. 이러한 관료제는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발휘하는 일종의 메타지식기구이었다. 한편, 18~19세기를 거치면서 근대국가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특히 서구 각국에서는 국가권력과 사회통제를 위한 지식체계가 크게 발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식의 과학적 형태로서 발달한 통계는 합리적 정책 수립과 함께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감시(surveillance)를 가능케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지배계급의 사회적 통합을 정당화하는 ‘지식국가’의 기능을 가능케 하였다.³⁹⁾ 이러한 지식권력은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연장선에서 자본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지식국가를 탐구한 풀란차스(Nicos Poulantzas)의 ‘과학국가(scientist state)’⁴⁰⁾와도 맥을 같이 한다.⁴¹⁾

대외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에 의한 정보의 수집·저장·활용은 근대 지식국가의 감시권력의 사례를 보여준다. 기든스에 의하면, 정보의 통제를 바탕으로 한 집단행동의 감독을 의미하는 감시는 근대국가의 형성과정과 관련된 권위적 자원의 확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정보의 규칙적인 수집·저장·활용은 행정적 효율성과 군사력 및 경제력의 유지에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적 정보국가로서의 지식국가의 특성은 근대국가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근대 외교나 염탐(esionage)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식적인 국가기구뿐만 아니라 동인도회사와 같은 기관도 정보의 수집·저장·활용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한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지식 획득을 위한 인프라로서 구축한 전신 네트워크는 근대 국가의 대외적 팽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²⁾

IT의 확산으로 인한 감시적 정보국가의 권력강화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변환되고 있는 국가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로빈스(Kevin Robins)와 웨스터(Frank Webster)가 말하는 ‘신경망국가(cybernetic state)’의 부상은 IT의 발달이 감시국가의 행정과 통제를 점점 더 통합시키는 대표적 사례이다.⁴³⁾ 신경망국가의 통제 속에서 IT가 확산됨에 따라,

39) 최정운, 『지식국가론』.

40) N. Poulantzas, *State, Power, Socialism*.

41) 최정운과 풀란차스의 지식국가는 과학적 지식 또는 일종의 ‘아날로그 메타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식권력을 행사하는 모델로서, 근대 국민국가의 관료제 모델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관료지식국가(bureaucratic knowledge state)’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42) A.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D.R. Headrick, *The Invisible Weapon*: 土屋大洋, 『情報と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

43) Kevin Robins, and Frank Webster, *Times of Techno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소위 ‘공론장(public sphere)의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nt)’로 알려진 바대로, 온라인상의 토론이 점점 더 도구적이고 효율성 위주가 된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20세기 초 테일러주의(Taylorism)의 부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메타지식의 확산에 따라서 공론장의 논리를 넘어서 기술자와 관료들에 의한 사회의 과학적 관리가 비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감시의 확산으로 인해 정치적 삶의 규제와 여론의 엔지니어링 가능성이 증대되고, 개인정보의 정치적 유용 및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찰되는 국가의 권력은 마치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네트워어(netware)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연상시킨다. 즉 국가 구성원이라는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고, 업무 코드를 프로그래밍하며,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소프트웨어국가(software state)’의 모습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은 특정 자원에 기반을 둔 물질적 권력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고 네트워크를 스위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권력(network power)⁴⁴⁾ 또는 ‘변환적 권력(transformational power)⁴⁵⁾이다. 마치 컴퓨터 운영체계나 웹브라우저, 또는 인터넷 검색 엔진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연상케 한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국가로서의 네트워크 지식국가도 지식의 생산과정 자체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지식생산의 표준을 설정하고 지식담론을 통제하는 ‘매력정치(soft power politics)⁴⁶⁾의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권력을 발휘한다.

한편, 활동의 장을 달리 해서 나타나는 21세기 국가권력의 모습은 네트워크국가라는 개방체계의 정체성을 형성·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적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반결된다. 사실 국가가 구성원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경계 짓기’의 역할은 자기조직의 과정을 밟아가는 국가의 중요한 측면이다. 특히 국민/민족이 네트워크로 깨져나가는 마당에 국가는, 종전과 같이 영토를 기반으로 한 국민정체성의 형성을 시도하기보다는, 의미나 상징을 근거로 경계 짓기를 시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정당성의 확보를 추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에버라드(Jerry Everard)에 의하면, 교육이나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지구화된 공동체 또는 정체성에 재통합시키는 능력에 국가의 정당성 확보 여부가 달리게 되는데, 그 결과 국내적 계급경쟁보다는 대외적인 지식경쟁과 정체성 정치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옮겨간다.⁴⁷⁾

그러나 변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식권력의 영역에서 조차도 국가의 권력은 계속적인 도전을 받는다. 왜냐하면, 정보화시대의 지식은 국가의 합리적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디지털 메타지식의 생산과 활용에서 조차 국가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시대에는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시민사회의 전문가 네트워크 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정보처리 능력이 오히려 국가보다 앞선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하이퍼텍스트

44) David S. Grewal, “Network Power and Globalization,”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17(2), (2003), pp.89–98.

45) S. Braman, “Horizons of the State.”

46) 평화포럼21(편), 『매력국가 만들기』.

47) J. Everard, *Virtual States*, p.7.

환경에서 초국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단한 정보의 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의 재생산은 지식패권에 대한 대항 네트워크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국민국가 단위의 국민정체성(nationality)을 잠식하는 ‘네트워크 정체성(network identity)’ 일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지식과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기성의 지식권력에 대한 대항적 지식권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⁴⁸⁾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지식민주주의의 부상과 연계된 형태의 ‘시민적 지식국가(civic knowledge state)’에 대한 요구와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민적 지식국가의 요구는 최근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벌어진 네티즌들의 정책논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집단지성은 일견 탈국가적으로 보이는 변환적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사실 네트워크상에서 중심성을 제공하는 리더십이 반드시 기존의 국가 영역으로부터만 나오라는 법은 없다. 국가의 역할에 비견되는 사실상의 리더십이 사회 영역의 비정부 행위자들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베후얼 조직이 그 구성원들만의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⁴⁹⁾

VII. 맷음말

이 글은 네트워크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정보화시대의 국가변환을 개념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 글이 21세기 국가변환의 동인으로서 주목한 것은 정보화의 역할이다. 한편으로, 정보화는 지식의 권력적 함의를 부각시킴으로써 국가의 수단과 목표 및 기능적 성격이 변환되는 지식국가의 부상을 야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는 물리적·사회적 차원에서 복합네트워크를 등장시킴으로써 국가의 조직형태와 작동방식이 변환되는 네트워크국가의 부상을 야기한다. 요컨대, 21세기 국가변환은 정보화를 배경으로 하여 부상하는 지식국가와 네트워크국가의 복합적 변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글은 이러한 복합적 변환을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식’이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그 수단과 목표로서 지식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그 조직과 작동에 있어서도 지식변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국민국가의 양대 축인 국민/민족과 국가의 이완을 배경으로 하여 영토적 경계의 안과 밖에서 출현하는 개방형 복합네트워크의 형태로 부상하는 국가이다. 마지막 키워드는 ‘국가’이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변화하는 세계정치 환경에 대응하여

48) Ronald J. Deibert,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49) C.K. Ansell, “The Networked Polity,” p.309.

그 기능적 성격과 존재적 형태 및 권력 메커니즘을 교묘히 변형시키고 있는 국가이다. 요컨대,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지식과 네트워크의 복합적 부상에 대응하여 자기조직의 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국가의 미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개념적 차원에서 제기한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험적·이론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먼저,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부상하고 있는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실제 세계정치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출현하여 작동하는가? 서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보편이론의 차원에서 제기된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현실에서 획일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지역별·분야별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선행지표는 유럽의 사례이지만, 북미나 동아시아에서도 개념적으로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영토적 성격을 띠는 네트워크 지식국가가 출현할 수도 있다. 한편, 세계정치의 분야별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모습이 편차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군사,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각 분야의 성격에 따라 지식과 네트워크 및 국가의 조합이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은, ‘행위자 수준의 개념화’를 넘어서, ‘구조/체계 수준의 개념화’를 보완해야 할 이론적 과제를 안고 있다. 네트워크 지식국가에 대한 논의를 펼치다 보면, 이를 굳이 국가라는 행위자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이미 앞에서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시피, 행위자 수준의 분석이 자동적으로 구조/체계 수준의 분석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분석의 초점은 행위자의 속성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정치적 단위를 구성하는 조직원리나 행위자들의 관행을 구조화하는 구조의 특성에 두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21세기 세계정치 변환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세계질서 수준에서 조직화되고 있는 ‘정치적 권위의 아키텍처’⁵⁰⁾를 연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의 핵심 과제는, 다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행위자 수준에서 시작된 네트워크 지식국가론 그 자체가 행위자와 구조 수준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탐구하는 망제정치론 또는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으로 변환되는 데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제기한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은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환의 과정에 접어든 세계정치의 핵심을 드러내 주는 길잡이 개념으로서의 유용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은 변환의 뒤를 쫓아가는 관행을 넘어서 변화를 미리 읽어내려는 이론적 노력의 결실이다. 게다가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도 볼 때,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남의 렌즈’가 아닌 ‘우리의 렌즈’로 읽어내려는 이론적 노력의 중간보고서이기도 하다. 요컨대,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연구를 통해서 21세기 국제정치학계의 세계표준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세계정치’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50) R.J. Deibert,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p.10.

참 고 문 헌

- 김상배,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 (2003, 겨울) pp.33-58.
- 김상배, “기술과 지식, 그리고 기식(技識): 정보혁명의 국제정치학적 탐구를 위한 개념적 기초,” 『국제정치논총』 45(1), (2005, 봄) pp.57-82.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작,” 『세계정치』 26(1), (2005, 봄·여름), pp.93-120.
- 민병원, “불확실성 속의 질서: 복잡계이론과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40(1), (2006, 봄), pp.201-221.
-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 (서울: 박영사, 1962).
- 이용희, 『미래의 세계정치: 국가연합론 강의』 (서울: 민음사, 1994).
- 최정운, 『지식국가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노동통계 발달의 정치적 의미』 (서울: 삼성출판사, 1992).
- 평화포럼21(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서울: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2005).
- 하영선(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서울: 풀빛, 2004).
- 하영선(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 野中郁次郎(外編), 『知識國家論序說: 新たな政策過程のパラダイム』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2003).
- 土屋大洋, 『情報と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 インタ?ネットから見た國家』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
- Alic, John A. et. al., *Beyond Spinoff: Military and Commercial Technologies in a Changing World*,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2).
- Ansell, Christopher K.,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July 2000), pp.303-333.
- Ansell, Christopher K., and Steven Weber,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Open System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 (1999), pp.73-93.
-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2001).
- Barabási, Albert-László,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2).
- Braman, Sandra, “Horizons of the State: Information Policy and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45(4), (Autumn, 1995), pp.4-24.

- Braman, Sandra, "The Autopoietic State: Communication and Democratic Potential in the Ne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6), (1994), pp.358–368.
- Burke, Peter,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From Gutenberg to Diderot*, (Cambridge: Polity, 2000).
- Carnoy, Martin, and Manuel Castells,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s*, 1(1), (2001), pp.1–18.
- Castells, Manuel, *End of Millennium*, (Malden, MA: Blackwell, 1998).
- Castells, Manuel,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4), pp.3–48.
- Cerny, Philip G., *The Changing Architecture of Politics: Structure, Agency, and the Future of the State*, (London: Sage, 1990).
- Clark, Ian,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Deibert, Ronald J.,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Everard, Jerry, *Virtual States: The Internet a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 Fountain, Jane E., *Building the Virtual Stat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Chang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 Frissen, Paul, "The Virtual State: Postmodernisation, Informatis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Brian D. Loader, (ed.),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Politics, Technology, and Global Restructur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pp.111–125.
- Giddens, Anthony,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Giddens, Anthony,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Grewal, David S., "Network Power and Globalization,"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17(2), (2003), pp.89–98.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Headrick, Daniel R., *The Invisible Weapon: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s, 1851–1945*,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Innis, Harold A., *Empire and Communic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50).
- Jessop, Bob,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2003).
- Leander, Anna, "The Power to Construct International Security: On the Significanc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Millennium*, 33(3), (2005), pp.803–825.
- McCormick, Glenn, "Stateless Nations: 'I Pledge Allegiance To...?'" Michael J. Mazarr, (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World Politics*, (New York: Palgrave, 2002), pp.11–23.
- Nye, Jr.,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Ó Riain, Seán,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Ougaard, Morten, and Richard Higgott, (eds.), *Towards a Global Po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 Pearson, Maurice, *The Knowledgeable State: Diplomacy, War and Technology since 1830*, (London: Burnett Books, 1982).
- Porter, Michael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1990).
- Poulantzas, Nicos,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and New York: Verso, 1978).
- Robins, Kevin, and Frank Webster, *Times of Techno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 Rosecrance, Richard,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1999).
- Rosenau, James N.,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 Sandholtz, Wayne, et al., *The Highest Stakes: The Economic Foundations of the Next Security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Shaw, Martin, *Theory of the Global State: Globality as an Unfinished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Slaughter, Anne-Marie, *A New World Orde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Stewart, Julianne, "Is The Network State Reflected in Australian e-Health Project Evaluation?" Paper submitted to Communications Research Forum 2000, (2000), <http://www.crf.dcta.gov.au/papers2000/stewart.pdf> (검색일: 2006년 2월 14일).
- Strange, Susan, *States and Market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Pinter, 1994).
- Urry, John, *Global Complexity*, (Cambridge: Polity, 2003).
- Wendt, Alexander,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9(4), (2003), pp.491–542.

Searching for the Network Knowledge State : A Conceptualization of State Trans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ge

Kim, Sangba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 focus of theoretical discussion in International Relation has been moving from the mere decline of the nation state toward its transformation in a more complicated sense. Indeed, the state in the 21st century is not declining but adjusting its role and status to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ransforms itself into a new pattern. But, the existing literature on transformation lacks analytical attempts to understand how the current state transformation results in. Relying on the concept of the “network knowledge state,”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 future of state transform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concept of the network knowledge state could be summarized as three keyword. The first keyword in the network knowledge state is “knowledge.” The network knowledge state heavily depends on knowledge resources as tools to achieve its goal, and uses knowledge elements to operate its organization and to organize its architecture. The second one is “network.” The network knowledge state as an open and complex system emerges inside and outside the territorial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that is experiencing the disaggregation of its two pillars--nation and state. The third and last one is “state.” The network knowledge state actively copes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of global politics, and elusively transforms its functional characteristics, its ontological form, and its power mechanism. In short, the network knowledge state could be a futuristic form of the 21st-century state facing the entwined rise of knowledge and network, and pursing a kind of self-organizing process.

투 고 일 : 2006년 8월 31일
심 사 일 : 2006년 8월 8일
심사완료일 : 2006년 9월 7일